



14년

전북은행, 35년 지역사랑 실천

전주매일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음 2월 14일) 제39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실행의 시대' 전환점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전부개정 후 후속 입법
산업·의료·교통·농업 등 도민 생활 전반 아우르는 특례 32개 담겨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한층 확대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전부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후속 입법으로, 산업과 의료, 교통, 농업 등 도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32개 특례를 담아 제도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 인구 등록 시범 사업, 청년 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특례가 포함되면서 전북형 선도모델 구축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 도의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도 기대된다. 벽지 노선 교통 지원과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생활밀착형 특례가 반영되면서 교통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용,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입국관리 특례를 통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유연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2024년부터 한병도·조배숙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원택·안호영·이춘석·이성윤·윤준병 의원이 후속 발의에 나선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정부 협의를 거쳐 핵심 특례 32건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되고도 부산 특별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논의 등에 밀려 심사가 보류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설명회, 정책 대응을 단계별로 이어가며 법안의 수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통해 부처와 국회의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태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 함께 대응하며 입법 동력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 법안과의 경쟁 속에 논의가 지연되

는 등 우려곡절의 진통도 있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하며 입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시행령과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군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확보된 특례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도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지켜본 한 도민은 "특별법 개정이 전북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례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추가 특례 발굴과 3차 개정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가 명실공히 특별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 만큼, 전북이 개척의 시대를 넘어 '실행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퍼듀대 공동연구소 개소

지난달 31일 전북대학교 내 신학융합플라자에서 '전북대-퍼듀대 공동연구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양 대학 간 전략적 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관련기사 4면>

전북자치도-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본궤도'

7자 공동투자협약 후속 점검... 현대차 측 건의 57개 중 도 소관 25개 과제 이행 상황 공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현대차 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과 만나 새만금 투자협약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현대차그룹이 5개 정부 부처 및 도와 체결한 '7자 공동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로, 새만금 일원에 예정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차 측이 건의한 57개 과제 중 전북도 소관 25개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수전해기 설치 및 청정수소 생산과 관련한 보조금 정책 수립 문제를 놓고 중앙부처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도 차원에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특례를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새만금 일원에 초기 입주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조기 개통 확대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DRT 도입과 공공임대 확대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세부 일정을 살펴봤다.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 등 각종 R&D 과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신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로봇·AI 분야와 연계해 현대차의 실제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력 양성 분야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현대차 투자협약 이행에 발맞춰 마련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초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일원의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형 모빌리티 도입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의 투자 시기에 맞춰 산업부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해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7년부터 새만금 일원에 약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AI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 등 5개 핵심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협약 이후 현대차·국무조정실 등과의 핫라인 운영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위한 현대차 투자 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다. 현대차 관련 전북특별법 개정안 43개 조문 발췌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로 운영 중인 '새만금·전북 대혁신IT'는 4월 중 기본 청사진을 구상해 5월 중 종합 지원을 구축할 예정이며, 15개 부처·청과 격주로 점검 회의를 통해 현대차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정부의 종합지원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분야별 로드맵에 따라 투자협약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도 행정의 모든 중심에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현대차와 함께 세계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 쉼다 법정공휴일 지정법, 국회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인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및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도 이날 쉴 수 있게 하지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소득하위 70% 1인당 10~60만원... 2026년도 정부 추경안

중동전쟁 장기화 따라 별도 피해지원금 지급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하위 70%에는 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 부문에는 에너지 복지와 생산비 경감 지원을 추가로 없는 구조다.

지난달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민 부담 경감 5조1,0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에너지 복지 2,000억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민 서민층 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5조원 규모의 석유 최고 가격제한이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택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으로 넓혔다. 특히 지난 27일 선택용 경유를 추가 지정하면서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 2면에 계속 /뉴시스

